

공적자금의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
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자료

공 적 자 금 운 용 현 황

2001. 1

재 정 경 제 부

< 목 차 >

1. 공적자금의 조성배경	1
2. 공적자금의 개념 및 조성경위	5
3. 공적자금 운용체계	8
4. 공적자금 지원원칙	9
5. 공적자금 지원내역	10
6. 공적자금의 회수	12
7.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	15
8. 공적자금에 대한 반성과 과제	16

< 별첨 >	
1. 공적자금 연혁	
2.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내역	
3.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과 지원	
4.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과제	

1. 공적자금의 조성배경

외환위기 전후의 경제상황

□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

-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,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,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
-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
 -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

	96말	97말	98.3말	98.6말
* W/\$환율(원)	845	1,695	1,383	1,373
* 회사채 금리(3년, % 기말)	12.6	28.9	18.3	16.0
* 부도업체수(개, 일평균)	38.9	58.2	131.2	85.9
* 실업자수(천명, 기말)	425	556	1,182	1,485

-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(moratorium)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

□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

-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*에 따른 고비용·저효율구조, 과다차입과 과잉·중복투자,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

* 과거에는 72년 8.3긴급경제조치,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,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

-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, 기아, 삼미, 해태,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함

□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

-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,
- 97.11.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, 국유재산의 현물출자,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,
-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.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

□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

-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,
-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

□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

-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,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
-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음

<참고 1> 주요국의 공적자금 조성사례

(미국)

□ 80년대 단기예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주택저당대출 등 장기 대출에 운용하였던 저축대부조합이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라 부실화

- 89년 총2,878개 저축대부조합중 517개가 채무초과상태였으며 37개 기관이 도산

□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기 위하여 “금융기관개혁법”을 제정하여 “정리신탁공사”를 설립하고 총 501억불의 자금을 조성

- 이후 자금수요증가에 따라 91년 3월 “정리신탁공사편드 법”을 제정하여 300억불을 1차 추가조성하고

- 같은 해 11월 “정리신탁공사개선법”을 제정하여 250억불을 2차 추가조성

	89.8월	91.3월	91.11월	합계
• 자금조성액(억불)	501	300	250	1,051

(일본)

□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라 기업부도의 증가, 부동산·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여 국내외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하고 신용경색현상이 심화

○ 97.11월 이후 북해도척식은행, 야마이치증권 등 대형금융기관의 도산증가

○ 99.9월말 은행의 부실채권은 73.3조엔으로 총대출의 12.2%

□ 98.2월 「금융기능의 안정화를 위한긴급조치에관한법률」을 제정하면서 30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

○ 99.10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재생관련 9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30조엔을 추가조성

○ 2000.5월 10조엔을 다시 추가조성

	98.2월	98.10월	2000.5월	합계
· 자금조성액(조엔)	30	30	10	70

(스웨덴)

□ 90년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대출에 의존하던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던 은행들이 연쇄부실화

○ 자산규모 2위인 노드은행과 4위인 고타은행이 지급불능 직전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확대

□ 91~93년중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하여 653억크로네(7.3조원 수준)의 공적자금을 지원

2. 공적자금의 개념 및 조성경위

- ☐ 공적자금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장하고 붕괴된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임

공적자금

- 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
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을
통하여 조성한 자금(64조원)

- 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자금(18.6조원) 포함

- ☐ 정부는 공적자금 필요규모를 산출한 후 98.5.20일 제6차
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

- 98.6.16 :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
- 98.6.26 : 국가보증동의안 국회제출
- 98.9.2 : 국회의결(64조원 최종 확정*)

- * 97.11.18일 2조원, 97.12.22일 29조원을 국회동의를 얻어 조성한데 이어
98.9.2일 나머지 33조원에 대해 국회동의

- ☐ 64조원의 산출근거

- 98.3월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(3개월이상 연체여신기준)
규모를 총 118조원으로 추정(실제 확정치는 112조원 수준)
- 당시 은행감독원의 기준에 의한 부실채권(6개월이상 연체)
규모는 약 68조원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,
- 정부는 금융부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
기준을 감안하여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를 폭넓게 인정

- 118조원중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100조원으로 예상

■ 이중 부실채권 매입소요: 25조원

- * 부실채권 100조원중 금융기관이 50%를 부담하고 나머지 50%를 액면가의 50%수준에서 자산관리공사가 매입

■ 증자소요 : 16조원

- *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순손실: 35조원
(매각손 50조원 - 기적립한 대손충당금 15조원)
- + BIS비율 8%미만 은행의 추가증자소요: 4조원
- 금융기관 자체부담(50%수준 가정): 20조원
- 제일·서울은행 기출자분: 3조원

■ 예금대지급 소요: 9조원

- * 정리중인 종금사, 향후 정리가 예상되는 금고, 신탁, 증권사의 예금대지급소요를 전담

■ 98.5월 현재 기사용분 : 14조원(예금보험보기금 6.5조원, 부실채권정리기금 7.5조원)

- 이처럼 기사용한 14조원과 금융부실처리에 필요한 50조원의 소요를 합하여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

공공자금

- ☐ 공공자금은 차관자금, 국유재산,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을 통칭
- ☐ 공공자금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확보되기 이전에 주로 쓰이거나 법령상 공적자금으로 지원되기 어려운 금융기관(투신, 특수은행)을 위해 지원
 - 이와 함께 중소기업대출실적이 양호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을 활성화하여 부도를 방지하는 목적에도 활용
- ☐ 공공자금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입
 - 차관자금은 차관도입시 그 규모와 용도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
 - 정부예산을 통한 특수은행 출자의 경우도 국회 예산심의와 의결을 받음
 -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
 -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매입은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
- ▶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한 109.6조원(2000.8월말)을 공적자금으로 인식하고 관리
- ※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 정의(제2조제1호)
 - 예금보험기금, 부실채권정리기금, 공공자금관리기금, 국유재산, 한국은행(금융기관 출자자금에 한정), 공공차관의 자금이나 재산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

3. 공적자금 운용체계

- 공적자금은 재정부, 기획예산처, 금감위, 예보,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부처·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용

조성

- 재정경제부가 금감위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적자금 소요 추정
- 재정경제부가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
(법률근거: 예산회계법, 예금자보호법,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 법률)
- 국회의 심의를 거쳐 규모 확정

투입

- 공적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, 예금보험공사, 자산관리공사가 중심이 되어 집행
 - 일반적 절차: 부실금융기관 결정(금감위) → 자금지원요청(금감위 또는 인수 금융기관) → 자금지원(예보)
- 공공자금은 재정경제부가 금감위 등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지원

회수

- 공적자금의 회수업무는 자금집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수행
-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, 보유자산 매각, 파산재단배당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추궁 등을 통해 회수
- 재정경제부는 효율적 자금회수를 위한 제도개선을 담당하고, 금감원은 부실원인 조사 및 책임자 규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

4. 공적자금 지원원칙

☐ 공적자금 지원원칙은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고, IMF등과의 논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립

☐ 최소비용의 원칙

○ 엄격한 기준하에 공적자금 투입대상 기관을 선정하고,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를 거쳐 지원규모 결정

○ 공적자금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처리

☐ 손실분담의 원칙

○ 감사(주주), 경영진 교체, 종업원 인원감축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

○ 공적자금 투입후에도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·직원에 대해 민·형사상 책임 추궁

☐ 자구노력의 원칙

○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(MOU)의 체결을 통한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

☐ 투명성·객관성의 원칙

○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(prompt corrective action)를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확보

○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구조조정전문기구에서 공적자금을 투입

5. 공적자금 지원내역

☐ 2000.8월까지 총 109.6조원을 지원

-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 시한인 99년말까지 전액 사용
- 이중 25.3조원을 회수하여 약 18.6조원을 재사용
- 국유재산 등 공공자금은 27조원 투입

☐ 용도별로 보면

-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분 41.9조원
-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* 등에 따른 손실보전에 26.3조원 지원
- *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,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
-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으로 10.4조원 투입
-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은 31.1조원

* 용도별 공적자금 사용실적

(단위: 조원)

	출자	예금 대지급	출연	자산 매입 등	부실채권 매입	계
채권발행	20.5	10.0	11.0	2.0	20.5	64.0
회수자금	3.0	3.6	0.6	1.9	9.5	18.6
공공자금	18.4	0.9	0.2	6.5	1.1	27.0
계	41.9	14.5	11.8	10.4	31.1	109.6

□ 금융권별로 보면

- 금융결제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에 전체의 70%수준인 70.3조원 투입
- 제2금융권은 대주주의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면서
예금대지급,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39.3조원 지원
 - 종금은 주로 예금대지급을 위해 11.9조원 투입
 - 투신은 대주주가 없는 한투·대투에 5.8조원을 지원하는 등 12.2조원 규모를 투입
 - 보험은 출자 등을 통해 10.5조원 투입

* 금융권별 지원 현황(2000.8말)

(단위 : 조원)

	출자	출연	예금 대지급	자산 매입등	부실채권 매입	계
은행	29.1	10.2	-	9.8	21.1	70.3
제2 금융권	12.8	1.6	14.5	0.5	9.9	39.3
종금	0.2	-	10.1	-	1.6	11.9
증권	-	-	0.01	-	0.1	0.1
투신	5.8	-	-	-	6.4	12.2
보험	6.8	1.6	-	0.3	1.8	10.5
신협	-	-	1.5	-	-	1.5
금고	-	-	2.9	0.2	0.1	3.2
계	41.9	11.8	14.5	10.4	31.1	109.6

6. 공적자금의 회수

□ 공적자금은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우려는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원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비용으로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님

○ 투입된 공적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됨

■ 부실채권 매입 자금(31.1조원) ⇒ 시가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부동산 매각, 부실채권의 직접 매각 등을 통해 회수

*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잘 팔리지 않는 불량자산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법정관리·화의 등에 따라 처분에 제한이 있는데 주로 기인

■ 출자 등으로 보유한 주식(41.9조원) ⇒ 주식 매각을 통해 회수

- 보유중인 금융기관 주식의 매각에 따른 회수분은 경영정상화 정도와 전체경제상황 및 매각시점의 주식시장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바,

- 공적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출자금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각을 개시할 예정

- 예금대지급*·손실보전(26.3조원) ⇒ 해당금융기관 파산재단의 배당과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회수

* 예금대지급자금은 금융기관이 폐쇄될 경우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2000.12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전액 지급받은 국민수는 110만명에 이르고 있음

*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의 정상화를 통해 계속 존속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금자들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임

- 후순위채 매입(6.4조원) ⇒ 후순위채는 만기시 해당 금융기관이 상환

- 기타 매입자산(4조원) ⇒ 매입한 자산의 매각을 통해 회수

□ 이러한 방식으로 2000.8월까지 총 25.3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

- 예금보험공사는 주식매각, 파산배당금, 자산매각 등으로 7.5조원 회수

* 파산배당금 등 4.8조원, 주식매각 2.4조원, 자산매각 0.3조원

-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매입액 31.1조원중 15.9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17.9조원에 매각

-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
민·형사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철저히 추궁
- 금융감독원은 2000.11말 현재 총 279개 금융기관을 검사하여
2,169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조치하고 1,043명은 형사고발 및
고지
-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1,350명에 대해 4,523
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
 - 특히, 예금보험공사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와 대주주가
친·인척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일부
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등
은닉재산 조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중
- 앞으로의 공적자금 회수는 전반적인 경제동향과 출자
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정부는
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
- 향후 주가상승시 지원액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 경우
예금대지급으로 인한 손실도 보전할 수 있으나,
-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자금의 미회수손실로 인한 국민
부담은 어느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며,
- 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
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

7.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

□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대외신인도 개선, 금융기관 건전성제고, 시장규율확립 등 유·무형의 성과를 거둠

□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환위기의 극복

○ 97말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였던 국가신용등급이 99년부터 투자적격이상으로 상향 조정

* S&P : (97말) B+ → (98말) BB+ → (99말이후) BBB

* Moody's : Ba1 → Ba1 → Baa2

○ 98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도 최근 둔화되고는 있으나 99년이후 9~10%를 기록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

□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

○ 97년말 금융기관의 23%에 해당하는 487개(2000.8말 기준)의 금융기관을 인가취소, 합병 등으로 정리

○ 은행 BIS비율도 97년말 7.0%에서 99년말 10.8%로 상승

○ 은행원 1인당 예수금이 97말 30억원에서 99말 50억원으로 증가

□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등 시장규율(market discipline) 정착에 기여

▶ OECD·세계은행 등 외국전문기관,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

8. 공적자금에 대한 반성 및 과제

-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제도·운영상의 일부 문제점 노출
 -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상환부담을 지는 예금보험공사의 독자적 역할 수행이 제한적
 - *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 및 자금투입규모 결정 등에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별도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
 - 공적자금 투입시 체결된 MOU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
 -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, 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에 한계
 - * 퇴출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·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어 파산재단으로부터의 공적자금 회수 미진
 - 그간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,
 - 특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(12.21 시행)을 계기로 공적자금의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
- < 투입단계 >
- 예보 운영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
 - * 금감원 실사자료를 예보에 송부토록 하고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대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

- 공적자금 투입원칙(최소비용원칙, 손실분담, 자구노력 전제 등)을 명문화

< 경영정상화 단계 >

- 금융기관과의 MOU체결시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고 나누어 지원하며 MOU 불이행시 총인건비 동결, 임직원 문책 요구 등 제재

< 회수단계 >

-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내에 매각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식 등 자산매각전략을 수립
-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도록 의무화

< 관리체계 >

- 공적자금관리위원회*를 재경부에 설치하여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·조정기능을 수행

*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위해 국회, 대법원에 대상자를 추천의뢰(99.12.6)한 바 있으며,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구성하여 활동을 개시할 예정임

- 공적자금 운용현황은 국회에 분기별로 정기보고

☐ 한편, 금융부실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데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

- 시가평가제 실시, 예금부분보장제 전환, 경영공시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

◇ 앞으로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하여

- 제도개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,
-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부실을 그때 그때 금융기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,
-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보유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함으로써

◇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

< 참 고 자 료 >

【 참고 1 】 공적자금 조성·운용 관련 주요 연혁

- ☐ 1997. 12. 3 IMF와 자금지원 합의
- ☐ 1998. 4. 14 금융·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 발표
- ☐ 1998. 5. 20 64조원 공적자금 조성 방침 발표
- ☐ 1998. 6. 29 5개은행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
- ☐ 1998. 9. 2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(64조원 조성 완료)
- ☐ 1998. 9.29 23개 은행 부실채권 매입(9.1조원)
- ☐ 1998. 12.29 중소기업 지원실적 우수은행 후순위채 매입
- ☐ 1999. 11. 4 한국·대한투신에 대한 3조원 출자 방침 발표
- ☐ 1999. 12. 23 제일은행을 미국의 Newbridge Capital에 매각
- ☐ 2000. 9. 22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방침 발표
- ☐ 2000. 12. 2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
- ☐ 2000. 12. 2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
- ☐ 2000. 12. 30 6개 은행에 대한 출자(4.1조원)

【 참고 2 】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내역

은행부문 : 70.3조원

97년말 BIS비율 8%미달 12개 은행

□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「경영평가위원회」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여부를 평가

① 5개 정리은행 : 동남, 동화, 대동, 충청, 경기

- 평가결과 자체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'98.6월 우량 은행(주택, 신한, 국민, 하나, 한미)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
- 5개 은행의 순자산부족분에 대한 예보의 출연(9.6조원), BIS비율 하락보전을 위한 우선주 출자(1.2조원), 부실채권매입(1.1조원), 후순위채 매입(0.3조원) 등의 방식으로 지원

② 7개 조건부승인은행 : 상업, 한일, 조흥, 충북, 강원, 외환, 평화

- 정상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7개 은행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
- 합병(한빛,조흥), 외자유치(외환), 증자(평화)등 자구노력이행을 조건으로 출자·부실채권매입 등 공적자금 지원

구 분	공적자금·공공자금 지원(조원)		비 고
	증자·후순위채 매입	부실채권매입	
한빛(상업·한일)	3.9	2.5	99.1합병
조흥(조흥,충북,강원)	3.3	2.2	99.5(충북), 9(강원)
외환	0.4	1.5	외자유치(Commerz)
평화	0.4	0.1	

97년말 기준 BIS비율 8%초과 13개 은행

☐ '98.8월 실시한 경영진단결과를 기초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후 적기시정조치(PCA)를 부과

① 자율합병은행 : 하나(하나, 보람), 국민(국민, 장은)

- '98.9월 자율적인 합병추진을 발표하고 99.1월 합병을 완료
- 예금보험공사는 하나은행에 우선주 출자(0.3조원) 지원

② 경영개선조치 부과은행 : 제주, 부산, 경남

- 경영개선요구·권고를 받은 3개 은행은 경영진교체,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여 자체 경영정상화 추진

③ 자체정상화 추진: 신한, 한미, 광주, 전북, 대구

- 유상증자, 업무이익 등을 통해 자체 자본확충 추진
- ☐ 8%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출자지원 없이(하나은행 제외) 부실채권 매입(4.6조원)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매입(3.1조원)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

제일·서울은행

☐ IMF 위기이후 예금인출로 정상영업이 어려워진 제일·서울은행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출자후 해외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

- '98.1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1.5조원을 출자

☐ 정부는 양 은행의 해외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결정

○ 99.7~9월 예금보험공사 출자지원 및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경영정상화 지원

*제일: 51조원(출자 42, 부실채권 0.9), 서울 45조원(출자3.3, 부실채권 1.2)

☐ 제일은행은 Newbridge와 MOU(98.12말) 및 본계약('99말)을 체결함으로써 해외매각이 완료

○ Newbridge가 인수하지 않는 제일은행자산을 예보가 매입(3.5조원)

☐ HSBC와의 MOU체결후(99.2월) 매각협상이 종료된 서울은행은 2000.4월 Deutsche 은행과 구조개선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진개편 및 구조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

특수은행

☐ 산은·기은·수은에 대해서는 국내기간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출자등을 통해 정상화(10.8조원)

* 산은 7.1조원, 수은 1.9조원, 기은 1.8조원

제2금융권 : 39.3조원

종합금융회사

- ☐ 97말이후 종금사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30개사중 21개사를 계약이전, 청산, 합병 등의 방식으로 정리
 - 97.12월이후 30개 종금사에 대한 재산실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4개사를 인가취소
 - 98.8월이후 대주주 부도, 기아차 부채탕감, 대우 워크아웃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대한·나라종금 등 4개사를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인가취소
 - 한외(99.1 외환은행), 현대(99.2 강원은행), LG(99.10 LG증권)는 은행·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해 업종전환
 - ☐ 퇴출종금사의 자산·부채는 가교종금사(한아름종금)로 계약이전하여 정리
 - 퇴출종금사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위해 10.1조원*을 지원
- * 폐쇄종금사 관련 금융기관 미지급예금은 제외
- 종금사의 부실채권 매입(1.6조원)을 통해 경영정상화 지원

보험회사

- ☐ 경영정상화계획 평가결과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국제 등 4개 생명보험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, 삼성생명 등 우량 보험사에 계약이전 조치(98.8월)하고, 1.2조원의 손실을 보전
- ☐ 98.8월이후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14개 생보사중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부실생보사에 대하여는
 - 2.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후 2000년 상반기에 매각(5개사) 또는 계약이전 방식(두원)으로 정리
- ☐ 대한생명의 경우 대내외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정인수자가 없어 2조 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우선 추진
- ☐ 서울보증보험은 98.11월 합병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증자지원(99.6월, 1조2,500억원)을 통해 정상화 추진
 - 대우워크아웃 추진에 따라 2000.8월까지 대우계열사 발행회사채에 대한 대지급을 위해 1.4조원 추가 출자

투신사

- 투신사는 대우문제에 따른 부담과 누적부실 해결을 위해 강도높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
 - 대부분의 투신사는 대우 무보증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자체 흡수 가능
 - 일부 자체 해결이 어려운 투신사중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해 자체 해결
 - 대주주가 없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누적적자와 대우부실로 인한 손실로 인해 시장불안이 심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 추진
 - 99.1월 1차적으로 대우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국채 은행, 정부 및 기존주주 등이 3조원* 출자
 - * 이중 국채은행(1.9조원), 기존주주(0.2조원) 출자분은 공공자금에 포함되지 않음
 - 이후 대우채 손실이 예상보다 커지고, 오래동안 쌓여온 신탁재산의 부실을 clean화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추가로 현재화되어 2000.6월 4.9조원의 추가 출자
 - 투신사보유 대우채권(18.5조원)은 2000.1월 자산관리공사에서 6.4조원에 인수

상호신용금고

- ☐ 금고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회생이 어려운 부실금고는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정리
 - 97년말 231개 금고중 78개 부실금고를 인가취소, 제3자 인수 등으로 정리
 -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예금대지급(2.9조원)과 부실채권 매입(0.1조원) 등으로 3.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

신용협동조합

- ☐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및 자율적 합병 유도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
 - 97말 1,666개 신협중 340개 부실 신협을 합병·파산 등으로 정리
 -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예금대지급을 위해 1.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

【 참고 3 】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과 지원

공적자금(40조원) 추가조성

- 공적자금 64조원을 조성한 이후 정부는 가능한한 국회가 동의해준 공적자금 범위내에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
 - 98년 하반기부터 대우문제로 인해 금융권에도 점차 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나,
 - 국민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충당해 나가고자 하였음
 - 2000.5월 당시 정부는 향후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필요한 공적자금 소요를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,
 - 기회수재원과 자산담보부증권(ABS)발행, 보유주식의 처분 및 일부 차입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음
- 그러나,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
 - 대우그룹문제 확대, 은행클린화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공적자금의 소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불가피
-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여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도 감안

□ 추가조성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는

- 대우그룹 문제에 따른 영향과 2000년중 신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에 따른 은행의 잠재부실 인식, 11.3 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은행손실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
- 40조원(추가소요 50조원, 자체조달 10조원)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12.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

* 추가공적자금 소요 추정

(단위 : 조원)

	구 분	5월 계획	조정규모	조 정 사 유
기 발 생 요 인	①구조조정대상은행 출자	1.8	6.1	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은행등의 BIS비율 10%유지 등
	②서울보증 출자	5.3	8.3	대우자동차 매각지연 및 워크아웃 손실 등
	③보험사, 금고·신협 추가구조조정 등	3.9	6.9	
	④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·대투출자, 제일은행 풋백 등	19.3	20.1	
추 가 요 인	⑤수협·농협 출자	-	1.7	
	⑥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가충당금 적립 지원	-	1.0	
	⑦한아름종금 손실보전, 산은·기은의 투신출자 지분 매입 등	-	5.9	
소요 계		30.3	50.0	
조달 계		30.4	10.0	*정부보유주식의 매각시기를 2002년 하반기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자금조달규모가 크게 축소

추가조성이후 공적자금 지원

□ 2000.12월중 은행출자지원, 서울보증보험 출자 등으로
약 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

○ 6개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(MOU)을
체결하고 총 7.1조원중 1차분 4.1조원을 투입(12.30)하여
BIS비율 10% 충족

- MOU에는 1인당 영업이익 목표 설정(2001말 시중은행 2.0억원,
지방은행 1.6억원), 퇴직금 누진제 폐지, 부장급이상 연봉제 도입
(2001말 완료) 등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노조동의서 징구

○ 서울보증보험(1조원), 4개 영업정지 종금사가 편입된 하나로
종금 출자(1.2조원) 및 산은·기은 보유 투신사 주식을
예금보험공사가 매입(1.9조원)

□ 나머지 소요도 금년초 투입계획을 확정하여 가급적조
기에 지원할 예정

□ 12월중의 공적자금 지원은 “공적자금관리특별법”의 취
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

○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 정기보고할 예정임

【 참고 4 】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 및 계획

은행 구조조정

-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6개 은행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
 - 잠재손실 전액 반영시 2000. 6말기준 BIS비율이 8%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은행(한빛, 조흥, 외환, 평화, 광주, 제주)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(9.30)
 - 조흥·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승인, 한빛·평화·광주·제주은행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조치(11.8)
 - 한빛 등 4개 불승인은행 및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, 경영합리화 계획 등이 포함된 수정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고
 - 한빛 등 6개 은행(서울은행 포함)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, 감자명령 및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지원 요청(12.18)
 - 한빛 등 6개은행(서울은행 포함)에 대하여 공적자금 1차분 4.1조원 투입(12.30)

□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한빛, 평화, 광주, 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1/4분기중 출범을 목표로 설립작업 진행

○ 현재 예보에 금융연구원 및 예보 직원으로 구성된 설립 준비팀 설치·가동중(12.19)

○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준비 사무국을 설치(1월중) 하여 설립 작업 본격 추진

○ 2002년 3월말까지 국제적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으로 편입금융기관의 기능재편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02년 6월말 이내에 기능재편 등을 완료

* 서울은행은 2001년 상반기중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편입

*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이 경영자문*을 통해 제주은행의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동지주회사에 편입 예정

* 신한·제주은행은 통합 추진을 위한 경영자문계약 MOU 체결(12.15)

□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·겸업화 유도

○ 국민·주택은행은 MOU를 체결(12.23)하고 합병작업 추진중

□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(CRV) 등의 출범을 적극 활용

제2금융권 구조조정

- ☐ 부실화된 한스, 한국, 중앙 및 영남중금을 통합(11.21)한 하나로중금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
 -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(12.22)된 리젠트중금은 자산·부채 실사후 처리방안 마련
 - 영업중인 중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(한불), 합병(동양+현대울산) 등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지원 추진
- ☐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% 미만인 11개사를 점검하여 자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5개사*에 적기시정조치 부과
 - * 삼신·한일·현대(생명보험), 국제·제일(손해보험)
 -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3개 생보사(삼신·한일·현대)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
- ☐ 현대투신증권은 외자유치 등 자본확충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
- ☐ 금고는 지난해 12월말까지 불법·부실금고를 대폭 정리
 - 향후 명칭변경, 지배구조 개선, 감독 강화 등으로 공신력을 제고하여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 유도
 - 신탁은 지속적으로 경영실태를 점검하고, 회생가능성이 없는 조합은 구조조정 추진